

#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50%까지 허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교육당국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166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인 827개교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15%(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참여 가능)로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66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교감 회

##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 공모부터 적용 "‘초빙형 공모’ 일반고로까지 확대 시급"

원 비율이 높은 교총의 극심한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시·도교육청 공문, 팩스 등을 통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교육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은 931건,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은 929건으로 집계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기타 의견은 55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1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하반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신청 학교가 있어도 15% 비율 제한에 걸려 시행이 불가능했다.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했다. 지난해 3월 1일 기준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중고 교장으로 임용된 인원은 56명으로, 전체 국·공립 학교 9955개교중 0.6%에 불과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고르게 구성된다. 현행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학

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위원의 40~50%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위원의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으로 채워진다.

또 위원의 10~30%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비공개였던 학교·교육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일반고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고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 온 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시스

### 요양병원 5년새 46% 급증... 고령화 영향

고령화의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대형화·산업화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의 증가율을 병상규모별로 보면 '30~99병상'은 359개에서 235개로 8.1% 감소한 반면, '100~299병상'은 598개에서 1071개로 12.4% 증가했고, 300병상이상은 31.5%로 늘었다. 특히 요양병원이 대형화되는 배경에는 고령 환자들을 위한, 이른바 '실버 산업' 성장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전남 전 지역 AI이동제한 해제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 유지

전남지역에 대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전남도는 AI발생으로 설정됐던 나주, 영암, 장흥, 강진 4개 시·군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13일자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장흥 회진면에서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사육하는 닭, 오리, 비어있는 축사의 환경시료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도,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오리농가에 대해 입식전 방역 점검 및 빈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입식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기이고, 현 시점에서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간호사 절반, 면허 따고도 병원서 일 안 한다 의료기관내 갑질문화 등 영향으로 이직·퇴직 잦은 탓

간호사 절반 이상이 면허를 취득하고도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간호사 인력수는 면허자수 기준 3만5501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신고된 인력을 기준으로 한 실제 활동인력수는 17만1508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나머지 절반(18만3508명)은 의료기관에 종사 중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10만

8374명으로 가장 많고, 의료기관과 전혀 무관한 '기타직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5만1157명으로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1만7186명, 교육기관 3247명, 공공기관 3043명, 요양시설 501명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중증외상센터 소속 의료인력의 근무 실태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처우와 성심병원 장기자랑 사태, 태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관 내 갑질 문화 등의 영향으로 이직과 퇴직이 잦은 탓으로 풀이된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다른 의료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5.2세로, 의사(43.8세), 약사(47.3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활동인력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 30대 활동 간호사 기준 320만원으로, 40대 의사(1600만원), 30대 약사(500만원)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평균근무년수 역시 간호사는 5.4년으로 의사(6.4년)약사(6.4년)에 비해 짧고, 평균이직률도 간호사가 20.4%인 반면 의사(18.5%), 약사(18.2%)로 낮았다. /뉴시스

## 광주시민 94.2% "문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광주시민 94.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어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권 성추문으로 전국적인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지역민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지난해 10월 1차 평가때인 93.8%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까지 광주 거주 19세 이상 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

령 직무수행 평가를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94.2%, '잘못하고 있다'가 3.6%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5%, '모르겠다·무응답'은 0.8%다. /김성은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             |   |
|-------------|---|
| 공고광고        |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
| 준공고광고       |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
| 부동산광고       |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
| 정치 및 긴급성 광고 |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
| 안내광고        |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